

2.25국민파업 “국민의 명령이다 박근혜는 퇴진하라!”

8 홍미리 기자 | ㉠ 승인 2014.02.25 21:22

서울광장 등 전국 12곳서 정권 퇴진 외쳐...전태삼 동지 등 3명 연행



▲ 25일 서울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박근혜 정권 1년, 이대로는 못살겠다' 국민파업 대회가 열렸다. 이날 12개 지역에서 노동자와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박근혜 퇴진'을 외쳤다. © 변백선 기자

박근혜 대통령 취임 1년을 맞은 2월 25일 서울광장을 비롯해 전국 12개 지역에서 노동자와 시민들이 일손을 놓고 거리로 뛰쳐나와 “박근혜 퇴진!”을 외쳤다.

‘박근혜 정권 1년, 이대로는 못살겠다’ 국민파업 대회가 25일 오후 4시 서울광장에서 펼쳐졌다. 서울광장에 3만명 이상의 노동자와 시민들이 집결했으며, 전국 다른 지역에서도 수천명씩 운집해 박근혜 정권 1년 간 쌓인 민중의 분노를 토해냈다.

노동자와 시민들은 서울광장에서 국민파업 대회를 진행한 후 행진을 벌여 을지로 롯데백화점 사거리와 광고 등 거리로 진출해 왕복 차도를 점거한 채 박근혜 정권 퇴진을 소리 높여 외쳤다.

25일 국민파업 대회 실천투쟁 과정에서 총 3명이 연행됐다. 전북지역에서 새누리당 전북도당 앞에서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2명이 연행됐다. 서울 대오가 을지로입구역 앞에서 경찰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전태삼 동지가 연행돼 강서경찰서로 이송됐다.

국민파업위원회 공동대표단, 박근혜 정권에 최후통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신승철 위원장, 전국농민회총연맹 김영호 의장,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강다복 회장, 전국빈민연합 조덕휘 공동의장, 빈민해방실천연대 김현우 공동의장,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인태연 공동회장,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 전국여성연대 손미희 상임대표, 민중의힘 박석운 공동대표가 함께 공동대회를 낭독했다.

국민파업위원회 대표단은 “박근혜 정부의 민주주의 파괴, 민생파탄, 한반도 전쟁위기에 맞서 노동자 농민 빈민 상인 학생은 분명히 일어선다”고 말하고 “일할수록 더욱 빼앗기고, 대기업의 착취를 막기는커녕 대기업 손을 들어주는 정부 하에서, 공안탄압으로 유신 독재를 부활하고 있는 2014년 한국사회에서, 더 이상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서 우리 노동자 농민 빈민 상인들이 일어선다”고 선언했다.

이어 “이제 투쟁으로 진출하는 민중과 함께 승리하는 것만 남았다”면서 “우리는 굳건히 단결해 어떠한 탄압에도, 어떠한 어려움에도, 두 손 꼭 잡고 박근혜 정권에 맞선 투쟁을 전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하고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박근혜 OUT'의 목소리가 활화산처럼 폭발해 나올 것 이라는 점을 박근혜 정권에게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 철도노조 이영익 위원장직무대리,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박준우 지부장이 무대에 올랐다.

의료-철도민영화, 연금개악 저지 결의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가 민영화가 아니라고 속이며 의료를 거대재벌의 돈벌이로 전락시키려 한다”고 말하고 “의료민영화는 국민건강권 포기정책이며 국민에게 대재앙을 안겨줄 것”이라면서 “보건의료노조 4만3천 조합원의 총파업투쟁으로, 80만 민주노총과 함께 5천만 민중과 함께하는 범국민적 투쟁으로 의료민영화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지난해 12월 철도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해 23일 간 파업을 벌인 철도노조가 2.25 국민파업 당일 24시간 경고파업을 벌이고 상경했다. 철도노조 이영익 위원장직무대리는 “철도노동자들은 지난해 파업투쟁을 전개하며 공공재를 민영화하면 안 된다는 전 국민의 공감대를 만든 소중한 경험을 토대로 박근혜 정부의 철도 분할민영화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박준우 지부장은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노인자살률, 노인빈곤률이 1위인데 박근혜 정부가 자신의 대선공약을 어기며 국민연금제도를 파탄내려 한다”고 말하고 “연금노동자들이 짝퉁기초연금을 저지하고 보편적 기초연금을 지키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공안탄압 규탄, 빈민장애인 생존권 보장 촉구

박근혜 정부 하에서 민주주의는 죽었고 민중생존권은 버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박래군 내란음모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수원지법이 지난주 이석기 의원 등 7명에게 4년에서 12년까지 선고를 내리며 정치사건 공안사건에서 사법부가 권력의 시녀임을 드러냈다”고 말하고 “유죄증거가 분명한 김용판에게는 무죄를 내리고 무죄증거가 확고한 이석기의원에게는 유죄를 내렸다”면서 “두려운 공포를 이겨내고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되찾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IMF 경제위기 후 2000년 만들어진 사회복지 공적 구조제도인데 박근혜 정부가 맞춤형 복지를 한다면서 이 법을 자본과 권력의 독사같은 입맛에 맞게 고치겠다고 한다”고 말하고 “가난한 자들, 장애인들의 삶을 지키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삶을 지키는 것이며 진정한 복지”라고 역설했다.

이어 상징의식이 펼쳐졌다. 북 공연과 함께 송경동 시인이 펄박받는 노동자와 각 부문 민중들의 투쟁과 절규, 짓밟힌 민주주의, 이에 맞서 반격의 횃불을 들자는 내용의 시를 낭송한 데 이어 투쟁의 봉화가 불타올랐다.

민주주의 파괴-노동탄압 규탄, 공공성 강화투쟁 결의

국민파업 대회 참가자들은 투쟁 결의문 낭독을 통해 국가기관의 총체적 부정선거, 사상의 자유억압, 각종 공안탄압과 노동탄압 등 민주주의 파괴에 맞서 투쟁할 것, 박근혜 정권의 민생 파탄에 맞서 골목과 장터와 현장에서 국민과 함께 민중생존권 쟁취 투쟁을 강력히 전개할 것을 다짐했다.

또 철도와 의료 등 공공부문의 민영화 저지와 공공성 강화 투쟁을 전개하고, 남북분단을 악용한 수구보수의 반통일, 반평화 기도에 맞서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자주통일을 위해 투쟁하며, 이명박 정권과 건설재벌에 의해 훼손된 4대강을 되살리고, 밀양송전탑 건설을 저지해 모든 생명이 어울려 살 수 있는 녹색사회를 향해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국민파업 대회 참가자들은 박근혜 정권의 온갖 실정을 규탄하고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며 박근혜 정부 1년 2.25 국민파업에 나선 이유와 요구를 천명했다.

“이대로는 못살겠다 박근혜는 퇴진하라!”

“국민의 명령이다 박근혜는 퇴진하라!”

“국민의 명령이다 민영화를 중단하라!”

국민파업 본대회에 앞서 스티븐 코든 국제운수노련 사무총장이 한국 노동자들에게 연대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지난 20일 보석으로 출소한 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과 박태만 수석부위원장, 최은철 사무처장이 국민파업에 참가한 노동자와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철도노동자들의 투쟁이 끝나지 않았음을 분명히 했다.

“행진 막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 불구 경찰이 인도까지 봉쇄

국민파업 대회에 이어 집회 참가자들이 평화행진에 나섰지만 경찰은 모든 행진 코스를 차단벽으로 막아놓고 중무장한 경찰병력을 동원해 인도까지 봉쇄했다.

경찰이 행진을 모두 불허했으나 법원으로부터 경찰이 행진을 막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진 상황에서 노동자와 시민들은 인도로 행진을 시도했으나 경찰은 을지로입구역에서 이를 막아섰다.

행진대오가 강력히 항의하자 경찰은 최루액을 뿌리며 집회 참가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맨 앞에서 저항하던 민변 권영국 변호사와 민주노총 임원, 산별대표자들이 최루액을 정면으로 맞았다.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시민들은 경찰의 봉쇄를 뚫고 롯데백화점 사거리와 광고 등으로 진출해 왕복 차선을 모두 점거한 채 “박근혜 퇴진!”을 외쳤다.

‘박근혜 정권 1년 이대로는 못살겠다’ 국민촛불대회

국민파업 참가자들은 오후 7시 다시 서울광장에 모여 ‘박근혜 정권 1년, 이대로는 못살겠다 국민촛불대회’를 열었다.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은 “오늘 이 시간까지 이 자리를 지켜주는 조합원들과 시민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고 말하고 “우리가 집회 한 번, 거리투쟁 한 번 해서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면서 “2013년 2월 25일 자본과 정권이 그렇게 싫어하는 단어인 ‘파업’을 내걸고 국민이 모여 투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2월 25일은 우리 투쟁의 시작일 뿐”이라면서 “온힘을 다해서 우리가 바라는 간절함을 이루는 그날까지, 우리 투쟁이 승리하는 날까지 끝까지 싸우자”고 강조했다.

촛불을 밝혀든 노동자와 시민들은 박근혜 정권 1년 잃어버린 것들을 투쟁으로 다시 찾겠다며 정권을 규탄했다. “노동탄압 중단하라!” “공안탄압 중단하라!” “민주주의 지켜내자!” “책임자를 처벌하라!”

한편 국민파업 대회가 열린 25일 자유대학생연합과 경우회 등 수구보수단체들이 서울광장 주변에서 집회를 열며 방해했지만 노동자와 시민들의 박근혜 퇴진 함성에 묻혔다. 이들은 대한문 앞에서 쌍용차 노동자들과 연대단위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했다. 문기주 쌍용차 정비지회장을 비롯한 수 명이 이들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12월 22일 경찰병력의 민주노총 침탈을 규탄하며 투쟁본부로 체제를 개편, 박근혜 취임 1년이 되는 2월 25일 국민파업을 농민·빈민과 함께 공동제안했다. 지난해 12월 28일 서울광장에 10만 명이 운집해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고, 지난 2월 12일 농민·빈민·유통상인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와 학생들이 모여 국민파업위원회를 결성, 2.25 국민파업을 준비했다.

한편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가 2.25 국민파업을 예고하자 정부와 경총 등은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와 경총은 지난 19일 2.25 파업 불법 엄단 방침을 밝혔고, 23일에는 총리실 주관 정부합동 대책회의를 열어 강력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민주노총이 낸 행진신고를 경찰이 모두 불허한 가운데 광화문-열린공원 가두행진에 대해 법원이 취소통보를

했다.

민주노총 가맹조직+시민단체들 서울 도심서 사전집회

이날 철도노조와 삼성전자서비스지회를 비롯한 민주노총 가맹조직들은 일제히 일손을 놓고 2.25 국민파업에 결합했다. 철도노조는 오후 3시20분 본무대에서, 화물연대본부(14시 새누리당), 공무원노조(14시 정부청사), 보건의료노조(14시 국회), 사무금융노조(13시 금융위), 서비스연맹(), 화학섬유연맹(14시 피죤 본사), 교수노조(14시 경향신문사 앞), 언론노조(15시 명동성당), 전교조(14시 보신각)는 각각 서울 도심에서 사전대회를 열 뒤 본대회 장소인 서울광장으로 집결했다.

빈민과 장애인도 오후 2시 서울광장 본무대에서 집회를 열고,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는 25일 기자회견(오전 11시, 청운동사무소 앞)과 교수연구자 시국대회(14시 경향신문사 앞)에 이어 국민파업에 결합했다.

서울연대는 영풍문고 앞에서 서울지역 총파업 결의대회를 가졌다. 시민사회 각급 조직들도 사전대회에 이어 오후 4시 서울광장에 모여 '이대로는 못살겠다 박근혜 정권 1년 2.25 국민파업'에 함께 해 박근혜 정권을 규탄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1년을 맞은 25일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11개 지역에서도 민주노총 조합원과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박근혜 퇴진을 외쳤다. 서대전 시민공원, 충북 청주상당공원, 천안터미널, 대구 반월당네거리, 부산역과 서면태화, 울산 태화강역, 경남 창원성산아트홀, 광주역, 전남 순천 연향동 대형약국 앞, 전북 전주 코아백화점, 제주시청 등에서 국민파업 대회를 열고 지역에 따라 행진을 벌인 뒤 거리에서 촛불을 밝혀들었다.

박근혜 정부 노동탄압에 대한 국제 항의행동 잇따라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력, 전교조 범외노조화, 철도노조 파업 탄압 등으로 촉발된 국제노동계의 연대가 2.25 국민파업에도 빚발쳤다.

2월 21일 국제노총은 온라인 캠페인 사이트 레이버스타트(Labourstart)를 통해 2.25 국민파업을 지지하기 위한 캠페인을 개시했다.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노동자들이 구속되고 손배가압류 소송을 당하는 것이 한국 사회의 현실이라는 점에서, 2.25 국민파업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막기 위한 연대행동의 일환이다.

국제노총은 박근혜 정부 1년 동안 한국의 노동기본권과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후퇴됐으며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노동자 구속 수감과 손배가압류는 성숙한 민주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레이버스타트는 현재 구속 중인 노조 간부들의 사진을 게재하고 박근혜 정부에 구속자 석방, 노조 간부에 대한 고소고발 및 손배소송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http://www.labourstartcampaigns.net/show_campaign.cgi?c=2183&src=lsmm)

스페인노총(USO), 이탈리아 제1노총(CGIL), 남아공노총(COSATU), 노르웨이공무원노조(YS) 등은 박근혜 대통령 앞으로 노동기본권을 인정하고, 민영화 연금개악을 중단하라는 서한을 직접 보냈다.

미국, 영국, 터키 등에서도 2.25 국민파업을 지지하는 연대행동이 펼쳐졌다. 영국노총(TUC)은 국민파업을 하루 앞둔 24일 한국 정부의 노동탄압에 항의하는 행동을 개최하겠다고 예고했으며

<http://strongerunions.org/2014/02/21/act-now-for-the-15-leading-trade-unionists-in-korea-in-jail-or-on-bail/> 미국노총(AFL-CIO) 샌프란시스코 지역본부는 2.25 국민파업지지 결의문을 채택하고

<http://sflaborcouncil.org/wp-content/uploads/2014/02/02-10-14ResSptKoreanWorkers.pdf> 2월 25일 오후 4시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앞 항의시위를 지역의 여러 단체들과 함께 준비하고 있다. 지난 해 12월 24일 민주노총 사무실 침탈에 항의하는 시위를 주이스탄불 한국 영사관 앞에서 개최했던 터키 민주노총(DISK) 역시 2월 25일 지난해보다 더 큰 규모로 시위를 개최하겠다고 밝혀왔다.

이밖에 일본 전노협, 프랑스 독립노조연합 (Solidaire) 등 여러 노동조합들도 국민총파업을 지지하는 연대서한을 보내왔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1년, 노동자와 시민 수십 만 명이 전국 곳곳에서 거리로 쏟아져 나와 박근혜 퇴진을 외쳤다. 민주노총은 2.25 국민파업에 이어 부정선거 규탄일인 3월 15일, 4.19혁명일 등을 넘어 2014년 계속해서 박근혜 정권 퇴진투쟁을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 국민파업 대회 공동대회사

박근혜 정권 집권 1년이다. 박근혜 정부 1년은 공약파기 민생파탄 민주주의 파괴로 점철된 나날이었다.

치솟는 전·월세 값, 공공요금의 인상, 2008년 이후 소득은 늘지 않지만 거침없이 오르는 물가로 인해 삶의 질은 곤두박질치고 서민들은 벼랑끝으로 내몰렸다. 또 지난 해 통계청 조사에서 국민의 46.7%가 '나는 하층민이다'라고 대답하여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노인빈곤을 OECD 국가 중 1위, 한국노동자 연평균 노동시간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처럼 노동자 농민 서민들의 삶은 팍팍해져만 가는데, 기업의 잉여금을 합한 금액을 말하는 사내유보율은 10대 재벌의 합계 1600%에 이르고 그 금액만 477조 원에 이른다. 피동피동 살찐 배를 두드리고 서민들을 더욱 악랄하게 수탈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런 극단적 불평등을 축소하겠다면 경제민주화와 복지강화 공약을 내걸고 당선되었지만, 집권 1년도 안되어 서민들을 내팽개친 채 기업들을 업어주어야 한다며 [규제완화와 투자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다. 대표적 복지 공약인 4대 중증질환 100% 국가 책임, 노인기초연금 20만원 지급, 무상보육 시행, 반값등록금 공약은 사과 한마디 없이 조용히 폐기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많은 국민의 저항에 부딪힌 민영화정책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수서발 KTX 주식회사 설립이 '민영화가 아니다'라고 강조했지만, 파업이 끝난 직후 인천공항철도 매각, 적자 지방노선 축소와 요금인상 등을 시도하고 있다. 이것이 민영화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또한 연초부터 박근혜 정부는 국민 중 70%가 반대하는 의료민영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철도 민영화, 의료 민영화는 서비스저하, 요금폭등으로 노동자 농민 서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지만 알짜배기 자산을 매입하게 되는 재벌과 초국적 자본들에게 이 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것 아닌가!

노동자의 삶도 박근혜 정권 1년 동안 추락에 추락을 거듭했으며, 노동자를 향한 정권의 발톱은 이미 모습을 드러냈다. 일한만큼 받아야 할 통상임금은 사용자들의 요구에 따라 반토막 날 지경이다. 노동자를 향한 정부-자본의 노조파괴 공작과 손배, 가압류 청구도 이미 도를 넘은지 오래다. 파견노동 업종을 전면 확대하고, 정규직 일자리를 쪼개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이 박근혜의 노동정책이다.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란 허울 좋은 미명 아래 헌법이 보장한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 난자당하고 있다. 최저임금은 여전히 '최악임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척양척애, 보국안민, 제폭구민'의 가치를 들고 갑오농민혁명이 일어난 지 120년이 지난 오늘의 농민들은 어떤가! 박근혜 정부는 한미FTA 이어 농업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한중FTA 밀어붙였고, 한호주FTA 졸속적으로 타결하더니 급기야는 환태평양동반자협정 (TPP)에 가입한다고 한다. 여기에 더해 올해 쌀시장마져 전면개방 하겠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의 농민정책은 정확히 농민말살,식량주권말살 정책인 것이다.

또한, 박근혜대통령은 지난 대선 시기 부양의무자기준 완화, 기초법 사각지대 개선,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연금 두 배 확대 등 빈민과 장애인에 대한 공약으로 밝힌바 있으나, 집권 1년도 안되어 장애인 연금 두배 공약은 슬그머니 폐기하고 기초생활보장법은 개악을 통해 더 많은 빈곤층을 더 많은 죽음으로 내몰려 하고 있다. 노점상과 철거민에 대한 탄압도 더욱 거세지고 있다. 국민을 빈곤의 위협에 빠뜨리고 있는 것이다. 이는 빈민과 장애인에 대한 심각한 기만행위이다.

탐욕스런 재벌에 먹잇감으로 몰락한 600만 상인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처절하게 저항하고 있지만, 박근혜 정부는 이들을 철저히 외면한 채 재벌들에게 재벌과 기업들의 [갑질]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이 처럼 박근혜 정부는 [부자정책]으로 대다수 국민들을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다.

이 뿐인가. 2012년 대선에서 국정원 뿐 아니라 국방부, 국정홍보처, 안행부까지 나서서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했음이 드러나고 있고, 대선 개입 글도 처음엔 수백개가 밝혀졌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5만개로 그리고 121만개로 확대되어 그야말로 관권 부정선거가 사실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채동욱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윤석열 수사팀장 해임, 수사팀 해체 등 진실을 왜곡 은폐 축소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쓰레기통에 처박고 있는 것이다.

한편,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저항하면 바로 탄압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전교조가 그러했고 공무원노조가 그러했으며, 철도노조 파업의 이유로 민주노조 심장부인 민주노총에 경찰력을 불법적으로 투입해 짓밟았다. 급기야 내란음모사건을 조작하더니 군부독재시절에도 사례가 없는 정당을 강제해산하려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 의해 헌법은 유린당하고 있고 민주주의를 철저히 파괴되고 있다.

또한, 박근혜 정부와 미국은 한반도를 전쟁위기로 내몰고 있다. 작년 상반기엔 6.25 전쟁이후 한반도를 최고 전쟁위기 상황으로 내몰았다.

한미일 동맹 강화 운운하면서 사실상 한반도에 일본의 자위대를 파병할 수 있게 하는 일본의 군국주의 무장화를 돕고 있다. 이러한 한반도 전쟁위기는 결과적으로 군사력강화와 무기도입을 나타나고 그 무기도입은 90% 이상이 미국산이라는 점에서 전쟁위기는 미국에게는 그야말로 대박인 것이고 우리 국민들에게는 쪽박 일 수밖에 없다.

한편, 최근 표면적으로는 남북관계 개선 움직임이 있지만 그 속내엔 북을 붕괴시켜 흡수통일 하려는 [통일대박]론 도사리고 있다. 상대방을 고립압살하려는 통일대박론은 결과적으로 남북관계를 파탄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처럼 박근혜 정부의 민주주의 파괴, 민생파탄, 한반도 전쟁위기에 맞서 노동자 농민 빈민 상인 학생은 분연히 일어서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일할수록 더욱 빼앗기고, 대기업의 착취를 막기는커녕 대기업 손을 들어주는 정부 하에서, 공안탄압으로 유신독재를 부활하고 있는 2014년 한국사회에서, 더 이상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서 우리 노동자 농민 빈민 상인 등 일어서다.

우리는 똑똑히 보았다. 박근혜 정권은 공안탄압과 언론왜곡 보도가 없으면 지탱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8개월째 지속되는 관권 부정선거 규탄 촛불집회에서, 철도 파업 투쟁에서, 지난 비상시국대회에서, 민중의 분노를 보았다. 이제 투쟁으로 진출하는 민중과 함께 하는 승리하는 것만 남았다.

민중은 하나다. 우리는 굳건히 단결해 어떠한 탄압에도, 어떠한 어려움에도, 두 손 꼭 잡고 박근혜 정부의 맞선 거침없이 투쟁을 전진시켜 나갈 것이다.

나아가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박근혜 OUT]의 목소리가 활화산처럼 폭발해 나올 것 이라는 점을 박근혜 정권에게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14년 2월 25일

박근혜정권 1년. 이대로는 못살겠다

2.25 국민파업대회 참가자 일동

□ “박근혜 정권 1년 더 이상 못살겠다” 국민파업 결의문

박근혜 정권 집권 1년이 되었다. 우리는 10년 같은 1년을 살아가면서 박근혜 정권 민낯을 보게 되었다.

국민들은 박근혜 정권 집권 이후 총체적 관권부정선거로 민주주의를 어떻게 파괴되는지 보았고, 헌법을 어떻게 유린하는지 목도하였다. 국정원 등 공안기구가 어떻게 정치에 개입하는지를 보았고, 내란사건을 조작하고 나아가 정당강제해산까지 강행하며 민주진보세력 전체를 말살. 유신독재 부활로 장기집권음모의 실체를 뚜렷이 목도했다.

또 국민들은 경제민주화와 복지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워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사과 한마디 없이 파괴되고 슬며시 사라져 가는지 보았으며, 이후 규제완화와 투자활성화를 강조하면서 재벌 퍼주기과 부자정책이 어떻게 전격으로 변모하는지 분노에 찬 눈으로 지켜보았다.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가 수서발 KTX 주식회사 설립이 철도민영화가 아니라며 철도노조의 합법파업을 불법으로 만들고 탄압하는 모습을 보았으며, 이후 인천공항 철도 연내 매각, 적자노선 폐지 등 민영화 강행의 목소리를 들으며 박근혜 정권이 거짓말 사기정권임을 명확히 깨닫고 있다.

국민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미국과 박근혜 정부가 한반도의 위기로 조장하고 그 뒤로 MD와 킬체인 도입 등으로 미국산 무기를 수조원씩 구입하며 짬짜미로 국민세금을 통째로 빼앗고 나아가 국민들을 어떻게 전쟁의 공포로 몰아넣는지 잘 보았다.

박근혜 정부 출범 1년이 되는 오늘. 일할수록 가난해 지고, 일할수록 더 많이 빼앗기는 노동자 농민 빈민 상인 학생들이 더 크게 뭉쳐 거리로 나섰다.

세상 모든 것을 만드는 노동자는 일터에서 내몰려 생존의 벼랑 끝에 신음하거나, 300조원의 매출과 30조원의 영업이익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고용한 노동자가 배고파서 못살겠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을 견딜 수 없어 투쟁에 나선다.

세상 모든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민은 일하면 일할수록 더욱 커지는 빚더미에 깔려, 몰려오는 한중FTA와 한태평양동반자협정(TPP), 쌀시장전면개방까지 한 치 앞도 내다 볼 수 없는 절망을 견어 내고자 아스팔트 농사를 시작한다.

폭력 철거, 폭력 단속에 집도 노점도 빼앗겨 생존의 벼랑에서 헤어나고자 빈민이 나서고 장애인 생존권을 위해서 장애인이 함께 투쟁에 나선다.

재벌 아만적 행위에 맞선 상인과 반값 등록금 공약 거짓말에 분노한 학생 나섰다.

그리하여 이 땅 민중은 이제 하나다. 99%인 우리에게 남은 건 투쟁과 승리이고 1% 박근혜 정부에게 남은 건 민중의 분노와 외침에 밀리고 밀려 곤두박질 칠 일만 남았을 뿐이라고 선언한다.

이와 함께 우리는 다음과 같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국가기관의 총체적 부정선거, 사상의 자유억압, 각종 공안탄압과 노동탄압 등 민주주의 파괴에 맞서 끈질기게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박근혜 정권의 민생 파탄에 맞서 골목과 장터와 현장에서 국민과 함께 민중생존권 쟁취 투쟁을 강력히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철도와 의료 등 공공부문의 민영화 저지와 공공성 강화 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남북분단을 악용한 수구보수의 반통일, 반평화 기도에 맞서 투쟁할 것이며,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자주통일을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이명박 정권과 건설재벌에 의해 훼손된 4대강을 되살리고, 밀양송전탑 건설을 저지하여 모든 생명이 어울려 살 수 있는 녹색사회를 향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14년 2월 25일

박근혜 집권 1년, 국민파업대회 참가자 일동



홍미리 기자 gommiri@naver.com